

만주 땅의 역사에 대한 한·중의 시각 차이

—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

이 진*

The Conflicts of Korean and Chinese Perspectives over the History of Manchurian Territory

Jeon Lee*

요약: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고구려를 우리의 선대 국가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중국측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만주 땅이 중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서 만주 땅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측의 주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중국인의 국수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과학적 역사'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설부르게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국수주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만주, 동북공정, 고구려, 국수주의 역사관, 동아시아

Abstract: Since Goryeo was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tenth century, Koreans have believed that Goguryeo, which ruled almost all of the Manchurian territory, was one of the Three Kingdoms of their ancestors. This Korean perspective conflicts with the Chinese perspective that Goguryeo was a Chinese local government in Manchuria and the northern parts of Korean Peninsula. Modern Chinese people wish, by the measure of Manchurian Project, that the history of China includes the histories of all the ethnic groups in Manchurian territory. Although Chinese people attempt unreasonably to regard Goguryeo as an old Chinese local government, it is not from the Korean nationalistic viewpoint but from the scientific historian viewpoint that this Chinese perspective should be criticised and corrected. We should remember that the nationalistic viewpoints in East Asia may hinder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region.

Key Words: Manchuria, Manchurian Project, Goguryeo, nationalistic viewpoint, East Asia

1. 들어가는 말

한국·중국·일본의 동아시아 삼국은 매우 오랫동안 문화적 동화과정이 진행되어 온 국가들이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문화적 동화과정을 겪은 나라들을 지구상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에 집착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역사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듯싶다.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출발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매우 선두적인 국가였다. 근대 국민국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매우 국수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인들의 국수주의

역사관이 우리나라 근대 사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재야 사학자들은 이병도 박사를 비롯한 제도권 국사학자들이 일본의 식민사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국수주의 재야 사학자들이야말로 바로 일본인들의 국수주의 역사관을 더 많이 계승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한족(漢族)은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라는 역사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연속적으로 맡아왔다. 서남아시아-지중해연안-유럽이란 역사 무대에서는 이집트인, 유대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로마인, 터키인, 노르만인, 포르투갈인, 스페인인,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Professor, Schoo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gglee@gnu.ac.kr)

프랑스인, 영국인 등은 각기 다른 시기에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역사는 한족(漢族)이 연속적으로 중심 세력의 지위를 차지하여 온 동아시아의 역사와 상이한 점이 많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한족으로 동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한족으로 동화되지 않은 민족들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자리를 잡은 민족들뿐이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타민족이 한족으로 동화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역사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한족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해석하는 국수주의 성향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중국측이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이고, 만주 땅의 역사를 부당하게 중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시각은 과학적으로 볼 때 올바른 것이고 국제관계상으로도 볼 때 정당한 것일까? 우리는 중국측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난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중국에서는 만주에 대한 학술연구가 부진하였다. 그래서 중국에 소개된 만주에 대한 역사는 일본인이나 러시아인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를 편찬할 때도 옛 소련의 『세계통사』와 일본의 『동양사대기』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다(마대정, 2004, 36-38).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중국인들은 만주에 관심을 갖고 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만주가 오늘날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만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만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를 우리 한민족의 선대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측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에는 중국측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근래 필자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가』(1999), 『고조선과 고구려』(2005), “고구려가 한민족사로 인식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2003), “우리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등의 저서와 논문을 통하여 과학적인 국사학의 정립을 역설해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만주 땅의 역사에 대한 한·중 시각 차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인들이 만주 땅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만주 땅에 대한 우리의 기존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과학적인 역사’에 근거하여 한·중의 시각 차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찰하고, 나아가 한·중의 시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논지는 국사학계나 일반인들의 국수주의 시각과 상당히 대립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국사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2. 만주 땅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논의

여진(女眞)이라는 명칭은 주루진(Durzin)이라는 여진어의 음역으로서 ‘동쪽 사람’을 뜻한다. 여진은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사용되던 민족 호칭이었다. 여진은 춘추전국시대에는 숙신(肅慎), 한나라 때는 읍루(挹婁), 남북조시대에는 물길(勿吉), 수·당나라 때는 말갈(靺鞨)이라고 불리던 민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초기에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皇太極)가 종래의 여진을 만주(滿洲; Manchuria)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여진이라는 말이 일종의 비칭(卑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원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태종 홍타이지는 의도적으로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바꾸고 후금(後金)을 청(淸)으로 바꾸었다(김구진, 2004, 237-238).

누루하치(奴兒哈赤)가 만주족을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 혈연이 같은 집단을 먼저 통일하고, 그 다음에 혈연이 다른 집단을 하나하나 정벌하여 나갔다. 누루하치는 항복한 집단을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는데, 먼저 항복한 집단을 상류계층으로 편입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집단은 낮은 계층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경우에는 노예로 삼았다(김구진, 2004, 263). 업

밀히 말하면, 만주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여진족을 중심으로 동화하였기 때문에 여진족보다는 만주족이 보다 넓은 범위의 민족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주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만주족이 아니라 한족(漢族)이다. 1636년 청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만주 땅에 살던 만주족은 팔기병(八旗兵)으로서 중국 각지의 8기 군영으로 이주하였다. 만주 팔기는 씨족으로 편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씨족 구성원이 함께 이동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만주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청나라는 만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봉금(封禁) 정책’을 실시하여 조선과 중국 농민의 만주 이주를 봉쇄하였다. 이러한 봉금 정책에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족이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1850년대 광서제(光緒帝) 때에 이르러서는 중국 한족(漢族)의 농업 이주를 전격적으로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요동반도를 거쳐 이주해 들어온 산둥(山東) 지방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오늘날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억 명인데, 그 중에 만주족이 약 270만 명, 우리 민족이 약 192만 명을 차지한다. 만주족은 요녕성(遼寧省)에 주로 살고 있으나, 우리 민족은 길림성(吉林省)에 많이 살고 있다(김구진, 2004, 266-268).

오늘날 중국인들은 만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주라는 말 자체가 만주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만주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다. 중국은 1953년 이 만주 땅을 분리해 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으로 만들었다. 일종의 지역분리 정책인 셈이다(윤명철, 2004, 20-21).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만주 땅을 동북지방 혹은 동북3성이라고 부른다.

만주와 중원 사이에 축조된 만리장성은 단순히 군사적인 경계선이 아니었고 문화적인 경계선이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만리장성 북쪽의 만주와 한반도에는 지석묘와 비파형동검 문화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하였고, 이 문화는 만리장성 남쪽의 청동기 문화와 확연히 구분되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만리장성 북쪽의 민족들은 우랄알타이어족(Ural-Altai language family)의 언어들을 사용하였고, 남쪽의 민족들은 중국-티베트어족

(Sino-Tibetan language family)의 언어들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만리장성을 경계로 서로 다른 어족의 언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만리장성이 군사적인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경계선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원의 한족은 그들 자신을 북방아시아계의 민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원의 한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북방아시아 계통의 민족을 복속시킨 적이 있고 또한 북방아시아의 민족들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의 한족을 지배한 적이 있지만, 만리장성은 오랫동안 중원의 한족과 북방아시아계 민족들 간의 경계선이 되어 왔다. 오늘날 중국의 영토가 만리장성을 넘어 만주 땅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만, 만리장성이 중원과 북방아시아를 구별하는 정치적·문화적 경계선이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중국측 ‘동북공정’의 추진 주체와 추진 배경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를 기초로 1977년 5월에 세워졌는데, 현재 이 중국사회과학원에는 31개 연구소, 45개 연구중심, 약 300개의 2·3급 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은 중국의 모든 변강에 대해 연구를 하는 기구로 1983년에 설립되었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연구중심의 주임(마대정)·부주임 아래에 연구1부, 연구2부, 편집부, 종합처, 도서실, 망락신식부 등 6개부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1부는 동북(東北), 북방(北方), 서북(西北) 변강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고, 연구2부는 서남(西南), 남방(南方), 해강(海疆)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한다.

이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2002년 2월 28일부터 5년 기간으로 ‘동북공정’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였다. ‘동북공정’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만주 프로젝트’ 혹은 ‘만주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동북지방 혹은 동북3성보다는 만주라는 말이 훨씬 익숙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만주 프로젝트’를 중국측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동북공정’이라고 칭하고

자 한다.

‘동북공정’을 중국에서는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 연구공정)’이라고 부르고, 이를 줄여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고 칭한다. 이 ‘동북공정’에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을 축

으로 길림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동북사범대학 동북아연구중심, 길림사범학원 고적연구소,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인철, 2004, 204-205). 그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과학원은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의 만주 3성과 연합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동북공정’에는 중

표 3. 중국의 소수민족 인구와 인구 분포

순서	민족	인구	분포
1	장족(壯族)	15,489,630	광서 장족자치구, 운남성 문산 장족묘족자치구.
2	만족(滿族)	9,821,180	전국각지에 분포. 요녕성에 최다 거주.
3	회족(回族)	8,602,978	영하 회족자치구에 주로 살고, 감숙·칭해·하남·허북·산둥·운남 등 널리 분포.
4	묘족(苗族)	7,398,035	귀주·호남·운남·사천·광서·허북·광둥 등.
5	위구르족(유오이족)	7,214,431	신강 유오이자치구, 천산 이남의 각개 녹주에 최다 거주.
6	이족(彝族)	6,572,173	운남·사천·귀주·광서.
7	토기족	5,704,223	호남, 허북, 사천 삼성비련지구.
8	몽고족(蒙古族)	4,806,849	내몽고자치구. 신강·칭해·감숙·흑룡강·길림·요녕 등 성구의 몽고자치주·현.
9	장족(藏族)	4,593,330	서장자치구. 칭해성의 해북·황남·해남·과락·옥수 등 장족자치주와 해서 몽고족·장족자치주, 감숙성의 감남 장족자치주와 친족장족자치현, 사천성의 아패·감자 2개 자치주와 목리장족자치현, 운남성의 적경장족자치주.
10	부의족(布衣族)	2,545,059	귀주성 감남·검서 남쪽의 2개 포의족묘족자치주, 귀주성 기타지구. 운남성 나평, 사천성 영남, 회리야.
11	동족(侗族)	2,514,014	귀주성, 호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비인의 지구. 귀주성 검동남묘족동족자치주에 집중.
12	요족(瑤族)	2,134,013	광서장족자치구 및 호남·운남·광둥·귀주 등의 성.
13	조선족(朝鮮族)	1,920,597	길림성·흑룡강성·요녕성·내몽고자치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최다 거주.
14	백족(白族)	1,594,827	운남성 대리백족자치주에 주로 거주. 그 외에 운남성 각지 및 귀주성 필절지구, 사천성 량산이족자치주, 호남성 상식현 등에 분포.
15	합니족(哈尼族)	1,253,952	운남성 서남부 에뢰산구신평·진원·목강·원강·홍하·원양·녹춘·금평·강성 등 현.
16	카자흐족(哈薩克族)	1,111,718	신강유오이자치구이리합살극자치주, 목루합살극자치현, 파리곤합살극자치현.
17	여족(黎族)	1,110,900	해남성
18	파이족(傣族)	1,025,128	운남성서쌍판남태족자치주, 덕평태족경파족자치주 및 경마·동련향개자치현
19	여족(畲族)	630,378	복건·광둥·강서 3성의 교계, 복건·절강의 교계. 복건·절강 2성에 최다 거주(96%).
20	울속족	574,856	운남성 노강 울속족자치주.

자료: 이인철(2004), 198-200

국사회과학원장(이철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만주 3성의 최고위 관료(부성장) 등의 행정조직, 대학과 사회과학원 등의 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개요를 보면, 만주 지방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이 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 공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이 공정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만주 지방사 연구, 만주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 연구, 중국과 조선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변경 안정에 대한 연구 등이다. 만주 지방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그리고 만주와 한국의 현실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이철영 중국 사회과학원장과 우리의 재정경제장관에 해당하는 황희성 재정부장이 ‘동북공정’의 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과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과 동북 3성의 부성장 등이 지도됨을 맡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 정부 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동북공정’의 취지문을 보면, 이 공정이 단순한 학술적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최광식, 2004, 3-12).

중국이 ‘동북공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만주가 중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만주의 역사도 중국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700여 년 동안이나 세력을 떨치던 고구려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중국사에서 제외된다면, 만주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 포함하여 논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만주가 오늘날 중국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만주 역사 연구를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은 18개이고, 5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합치면 20개가 된다. 2001년 중국정부가 조사한 통계연구를 보면 <표 1>과 같다(이인철, 2004, 198-200). 중국과 같이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여러 민족을 통일적으로 대

변해야 하고 하나의 민족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한족(漢族)의 역사만을 중국사로 취급하게 되면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중국사에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역사에 단절된 시기가 있게 된다. 청나라 역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면 만주족의 선조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금나라 역사를 중국사에 넣어 다루게 되면 요나라의 역사를 중국사에 넣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를 중국사에서 제외시키고 한족(漢族) 중심으로 중국사를 기술한다면, 한족과 주변민족과의 전쟁사로 집결된 중국사로 인하여 한족과 주변민족과의 적대관계만 부각될 것이다(이인철, 2004). 중국에 살고 있는 어느 소수민족에게 “너희들은 원래는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원래 중국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소수민족들이 그러한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19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어 여러 국가로 나뉘어졌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소련의 해체와 같은 분열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연변과 같은 지역은 통일 이후의 한국이 하나의 지원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는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큰 지역으로 간주된다.

4. 중국측이 ‘동북공정’을 통해 얻은 성과

1) 고구려와 고려를 구분하기

먼저 중국의 학계에서는 고구려와 고려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는데, 근래에는 고구려와 고려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수·당 시대와 그 이후의 모든 사서(史書)에서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고, 어떤 중국의 사서에서는 “왕건이 고씨 왕위를 계승하였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양보음, 2004, 137 재인용).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구려와 고려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거나, 고려를 고구려의 실질적인 계승 국가로 인식하였었다. 그런데 근래 중국 사학자들은 고주몽의 고구려와 왕건의 고려는 별개의 왕조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AD 7세기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통일신라 영역에 포함되었지만, 대다수는 발해에 귀속되어 여진족으로 동화되었거나 혹은 당나라에 귀속되어 한족(漢族)으로 융합되었다. 통일신라에 편입된 주민들은 주로 삼한(마한·진한·변한)계 민족들이었고, 통일신라는 25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멸망하였으며, 통일신라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고려였다. 그러므로 고려는 상징적으로는 고구려의 후예임에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보기 어렵다(이중욱, 2006; 이진, 2005). 개성을 세력기반으로 하는 왕건이 평양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여진족을 포용하기 위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칭하였다고 해서 고려가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었다(이진, 2003, 2004, 2005).

중국인들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려와 고구려를 별개의 실체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한민족의 선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국인의 역사 인식이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 모두를 선대 국가로 인식해 온 우리 한민족의 역사 인식과 충돌하였다. 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고구려가 우리의 선대 국가 중의 하나임을 굳게 믿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사실 고려시대의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삼국을 공히 우리 한민족의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우리 한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이 세운 국가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이진, 2003; 이중욱 2006).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한다면, 중국측도 중국인의 역사 인식에 근거하여 그들의 역사를 기술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국사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 인식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과학적인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어야 한다.

2) 고구려인과 조선족을 구분하기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하여, 고구려라는 국가에는 말갈·마한·신비·한족·거란 등을 비롯한 다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웃 국가를 복속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족들이 고구려 영역에 편입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고, 이 중에 상당수의 민족들은 고구려에 종속된 이후에도 독자적 민족성을 간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가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국가 안에는 다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고구려를 세운 민족인 고구려족과 고구려에 귀속되어 있는 고구려인을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이진, 2005).

그런데 오늘날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고구려인의 직접적인 후예가 아니다. 다시 말해, 만주의 조선족은 고구려가 AD 668년 폐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만주에서 줄곧 살아온 고구려인의 후예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만주에 살던 고구려인들 중에 일부는 한족(漢族)으로 동화되었고, 일부는 통일신라 영역으로 들어와 한민족(韓民族)으로 통합되었으며, 상당수는 여진족(女眞族)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만주족(滿洲族)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그 만주족의 대다수는 한족으로 동화되었다. 그러므로 만주에 살던 고구려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늘날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근래 만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다. 한민족은 1860년경부터 만주로 들어가 황무지를 개간하고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는데, 특히 길림성 연변에는 월강(越江)하여 정착한 한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많았다.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 중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1931년 9·18 만주사변 이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에 대한 이민개척 계획을 세워 다수의 한민족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1945년 광복 이후에 다수의 한민족들은 한반도로 돌아왔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만주 지방에 남았다. 그 만주 지방에 남아 생활하고 있는 한민족이 바로 오늘날 만주의 조선족이다.

중국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우리 한민족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라·백제·고구려를 모두 한민족의 선대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족은 만주에 고구려의 유적이 산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만주는 고구려 땅이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한 만주가 고구려 땅이라는 사실 자체가 만주는 조선족의 조상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남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인식하지 않고 조상의 땅에 찾아와서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인식이 중국인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만주의 조선족은 고구려의 직접적인 후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구려의 후예인 체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5. '동북공정'의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비판

1) 한제국의 영역이 바로 중국의 영역이라는 주장

최광식(2004, 43)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단순한 역사 왜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국경문제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공정'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북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다(운호우, 2004). 그래서 평양 천도 이전은 중국사이고 평양 천도 이후는 한국사라는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근래에는 고구려사 전체가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역사 왜곡을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소에서 정부 주도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전성기시대의 로마는 지중해 연안과 서부유럽의 대부분을 통치하였다. 로마제국은 로마인들에 의해 출범하였지만 나중에는 다수의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를 이어받은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과 서부유럽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

안과 서부유럽의 역사 전체를 이탈리아 역사에 귀속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로마제국이 다른 인접 민족들의 의지에 반하여 통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로마제국의 영역이 결코 이탈리아 영역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당연한 말이다.

중국의 한제국은 중원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통치하였다. 한제국은 한족에 의해 출범하였지만 다수의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제국의 영역이 오늘날의 중국의 영역이 될 수는 없고, 한제국의 영역에 속하는 역사 모두가 중국사에 귀속되지도 않는다. 한제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주위의 이민족을 철저히 유린하면서 팽창한 제국이었다. 한제국의 팽창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페권주의)의 팽창이었다. 한제국은 다른 인접 민족들의 의지에 반하여 통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한제국의 영역이 결코 중국 영역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소수민족정권이었던 주장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정권에 불과한 소수민족정권이었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고구려족이 한족(漢族)의 한 갈래였다는 점이다. 즉, 고구려 선조가 상족에서 분리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하거나, 고이족을 중국 전설상의 인물 고양씨의 후예로 설정하여 고구려왕조의 후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일주서』는 문제가 많은 사서이며, 고이족은 BC 10세기경에 등장하는 민족으로 BC 1세기경에 등장하는 고구려와 시기가 맞지 않는다. 고양씨는 전설상의 인물인데, 이 전설상의 인물과 고구려를 연관시키는 것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다(최광식, 2004, 20-21).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한족들은 주변의 민족을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이라 멀리하면서 한족과 구별하여 왔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는 부여·고구려·동옥저·예·마한·진한·변한·왜에 대한 기록을 동이에 속하는 민족으로 묶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구려를 중국의 한족과 상당히 거리가 먼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언어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고구려를 건설한 민

족은 한족과 상당히 다른 민족임에 틀림없다. 고구려를 건설한 민족은 예족·맥족, 혹은 예맥족 계열의 사람들임에 틀림없는데, 이들은 한족(漢族)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북방아시아계 민족에 속한다. 고구려를 포함하여 만주와 한반도에는 북방아시아계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북방아시아계 민족들은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었다. 이들은 만리장성 남쪽의 중국-티베트어족의 민족들과는 언어상으로 매우 다른 민족들이었다.

한족(漢族)이 북방아시아계 민족들을 자국민으로 생각하였다면, 그들과 한족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리장성의 축조는 북방아시아에 중국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한 북방아시아계 민족들과 한족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단절시키려는 한족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북방아시아계 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을 모두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의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정권에 불과한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거는 고구려의 기원지가 한제국의 영역이었다는 점이다(양춘길·경철화, 2004, 157-164). BC 108년 한제국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소수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 현도·낙랑·임둔·진변의 한사군을 배치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현도군에 소속된 고구려 현을 지방관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관할하도록 한 것도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라는 국가가 한제국의 영역에 위치하였고 한제국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국주의(패권주의)적 발상이다.

또다시 로마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로마제국이 브리튼 섬이나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였다고 해서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들이 브리튼 섬이나 이베리아 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로마제국이 무력으로 지중해 연안과 서부유럽을 점령하여 중앙관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관할하도록 한 것이 오늘날 이탈리아가 그 영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로마제국의 시대에 이탈리아

반도, 브리튼 섬, 이베리아 반도에 서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로마제국과 마찬가지로, 한제국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다수의 민족들을 관할하였다. 로마제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제국의 영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한제국의 시대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다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고구려와 부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대회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오직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도 이들이 제후국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체제였음을 시사한다(유석재, 2004, 288-289). 또한 『후한서』에는 고구려가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한 기사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사군의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제국의 영역이 바로 오늘날 중국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제국주의(패권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3) 조공과 책봉이 종주국과 복속국을 규정한다는 주장

중국측의 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두 나라가 종주국과 복속국의 위치에 있었다든가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공과 책봉은 주변국가가 중국의 여러 왕조와 맺는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이미 널리 수용되고 있다. 만약 조공-책봉 관계를 문제 삼아 고구려를 중국의 복속국으로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백제·신라·왜(일본)·베트남, 심지어 고려·조선까지 중국의 복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다를없는 것이다. 나아가 청대에 중국 땅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 조공 형식을 밟았던 영국·스페인·독일 등 수많은 나라들도 중국의 복속국이라 할 수 있다(유정창, 2004, 6).

과거에는 조공-책봉 관계를 종주국과 복속국의 관계에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조공품보다 회사품(回謝品)이 많다는 데 착안하여, 조공-책봉 관

계를 무역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사학자들도 조공-책봉 관계를 동아시아의 고전적 국제질서로 파악한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조공-책봉을 통하여 국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최광식, 2004, 22-24).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조공-책봉이 중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한 형식적 절차이며 조공국의 정체성과 자주권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특히 고구려의 최전성기 때의 장수왕은 재위 79년간(실제로는 31년간의 기록)에 북위와 46회의 조공 관계를 맺었으며, 신라 성덕왕(AD 702년~737년) 또한 43회의 대당관계를 맺었음은 조공이 신속(臣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장수왕이 동시에 연·송·남제·진과 조공을 하였음이 이를 다시 증명해 준다.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중국을 위해 세금을 낸 일이 없었고, 중국의 외국 정벌에 군대를 동원한 일이 없었다는 점이 조공관계가 국제적 질서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신형식, 2004, 171-192).

광개토왕비나 중원 고구려비 등에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보이는데, 고구려왕은 대왕(大王), 태왕(太王), 성왕(聖王) 등을 자처했고, 영락(永樂)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칭하여 속민(屬民)으로 설정했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및 유목민 세계와 대등하면서도 그와 다른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대내외에 표방하였다(유석재, 2004, 292).

4) 고구려 대(對) 수나라·당나라와의 전쟁이 통일전쟁이라는 주장

‘동북공정’에 참여하는 중국측의 학자들은 수와 당이 고구려와 전쟁을 치른 것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중앙정권과 지방정권 간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다(양춘길·경천화, 2004, 157-164). 고구려와 중원왕조의 관계는 지방정권과 중앙정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와 당에서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침략전쟁이 아닌 중앙에서 지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전쟁이라는 것이다. 중국측 학자들은 수와 당의 황제가 고구려에 보낸 조서를 근

거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황제의 조서가 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7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수나라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왕조가 멸망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지방정권과 중앙정권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음에 틀림없다.

중국의 중앙정권-지방정권 개념은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ethnocentrism)에 근거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의 개념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은 민족의 자결권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배받는 민족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배받아야 하는 민족임을 자임하는 민족이 있을까? 어떤 논리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학자들은, 한족이 중앙정권을 맡아야 하고 고구려를 비롯한 다른 민족들은 지방정권이 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하는가? 고구려족이 주로 살고 있는 영역을 고구려가 통치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고구려 국가인 것이다. 고구려에 지방정권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구당서(舊唐書)』는 당의 고조(高祖)가 AD 622년 고구려 영류왕에게 보낸 공문편지에서 ‘이제 두 나라(고구려와 당)가 서로 화평을 통하게 되었으니(今二國通和)’라고 쓰고,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때 잡힌 수나라 군인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수록했다. 이 기록은 고구려가 당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당당한 독립국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팽창과정에서 말갈·마한·선비·한족·거란 등 다수 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관찰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확립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AD 5세기 중국 남북조의 북위(北魏) 정권조차도 고구려가 만주와 동몽고 일대의 구이(九夷)를 제압한 독자적 세력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결국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고구려가 국초부터 추진해온 팽창정책과 일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한족의 세계정책이 충돌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다(유석재,

2004, 294-295, 재인용).

6.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반만 년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의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반만 년 전에 단일 민족으로 출발하였음을 자랑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민족은 오랜 역사과정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동화과정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는 다수의 민족들로 구성된다. 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다수의 민족들은 문화적 동화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다수의 민족들이 얼마만큼 동화되었는가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 년 전부터 단일 민족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과정에서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것이다(이전, 2005).

민족의 역사가 길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집트나 이라크에서 일찍부터 고대문명이 발달하였다고 해서 오늘날의 이집트인이나 이라크인을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화 속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찾아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단일 민족의 역사가 오래되어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무조건 장구하고 찬란한 역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아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민족적 통합이 가장 잘된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한국은 아무리 지역적 정서가 분열되어 있어도 의심할 여지없이 단일 민족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동질적 문화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오늘날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단일 민족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브리튼 섬으로 들어와 오늘날의 영국인으로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들이 한반도로 들어와 오늘날의 한민족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반만 년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은 결코 과학적인 역사 서술이 아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국사교육은 한반도에 널리 분포하던 다수의 민족들이 오랜 역사과정을 통하여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단군조선 이래로 단일 민족의 역사가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야 한반도에 살고 있던 다수의 민족들이 점차로 하나의 동질적 문화 집단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교육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이종욱, 2006). 우리 한민족이 만주에 자리 잡고 역사적 삶을 영위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역사적 삶을 영위해 왔다. 그 후 활동 무대가 한반도로 좁아지기는 하였지만,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라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역사 서술(2002, 13)은 결코 ‘과학적인 역사’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2) 고구려에 대한 과학적 이해

고구려는 BC 37년 건국하여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를 근거지로 번성한 고대국가였다. 고구려는 19대 광개토왕(AD 391년~413년)과 장수왕(AD 413년~491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복을 감행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고, 남으로는 백제·신라와 맞서고 서쪽으로는 중국을 통일한 수·당과 겨루었다.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의 국가가 아니라 자주적인 독립국이였다. 고구려는 AD 668년에 나당(羅唐)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지만, 오늘날 만주 땅과 한반도 북부에는 고구려의 화려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2004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주와 한반도의 고구려 고분과 유적을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은 고구려의 전통과 문화는 발해·신라는 물론 당나라·일본까지도 영향을 주었으며, 고구려의 기상은 고려·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신사에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연구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북방사를 전공해 온 국사학자 서병국(1997)은 북방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만주 땅에서 건국된 발해국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로 고정되어 버린 우리의 역사무대를 만주 땅의 회복

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영하여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고 역설하면서 만주 땅 회복을 주장한다.

고구려족은 북방아시아 계통에 속하는 민족으로서 남방아시아 계통의 한족(漢族)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이었다. 만리장성 북쪽에서 우랄알타이어족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북방아시아 계통의 민족들은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중원의 민족들과는 기원적으로도 크게 이질적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이 세운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미 몇 번이나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는 다민족 사회였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의 중심세력이 통일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에 귀속되어 있던 다양한 민족들은 고구려의 폐망과 더불어 분열되어 각기 다른 역사적 과정을 밟게 되었다. 지난 천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를 우리 한민족의 선대 국가로 인식해 왔지만, 그러한 역사 인식은 ‘과학적인 역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신라가 통일신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영토를 전부 차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고구려를 상징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고구려를 우리 역사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은 통일신라가 기울기 시작한 무렵에 비로소 등장하였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무렵에 고구려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속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맥락에서 왕건은 새로운 국가의 국명조차도 고려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국명을 고려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건국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일 뿐이지, 고구려가 우리 한민족이 세운 국가라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여 말해 보겠다. 고구려 역사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규명하더라도, 고구려의 영토가 오늘날 한국-중국 국경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고구려의 영토가 우리 민족의 수복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현재의 국경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학자들이 역사상의 영토와 현재의 영토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양국이 서로 고구려를 자신들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고구

려 영토를 수복하려고 한다면, 양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제야 사학자들의 민족주의 사관 비판

19세기 말 이후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따라 민족의 정체성과 단결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일제강점에 대응하는 반일 감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민족주의 사학(民族主義 史學)이 등장하였다(한영우, 1990, 9). 신채호(申采浩)의 『독사신론(讀史新論)』에 의하여 토대가 마련된 민족주의 사학은 근대 사학의 단서를 열어 놓았고, 일본의 황국사관(皇國史觀)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옹립하려는 의식이 고조되었고, 나아가 단군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대종교(大倣教)가 성립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여진족·거란족·몽고족 등의 동이(東夷)를 배달족(倍達族)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간주하였고, 배달족 전체의 시조를 단군에서 찾았다.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 일제에 많은 타격을 주었으나, 우리 민족의 범주를 동이족 전체로 확대한 것은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더욱 폭압적으로 되고 마르크시즘 등의 역사학 방법론이 유입되면서 민족주의 사학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의 제야 사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야 사학자들은 제도권 사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사료를 발굴하여 독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학 발달에 기여하기도 하고, 정통 사학자들이 지나쳐 버린 주제를 새롭게 재조명함으로써 역사학의 연구대상을 확장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의 향토 사학자들은 지방에서 다양한 문헌을 수집·분류·정리함으로써 국사학계의 연구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앙의 사료가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제야 사학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제야 사학자들이 민족주의 사학에 너무 집착하여 역사학을 이데올로기 학문으로 몰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러한 제야 사학자들은 그들

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을 ‘과학적인 역사’에 근거한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재야 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어서 역사를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야 사학자들의 이러한 국수주의적 주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대단히 크다. 그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국수주의 성향을 불어넣는다는 데 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애국심에 충만한 재야 사학자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애국심만 길러주면 진실은 차선의 문제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심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7. 맺는 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의 각국들은 유럽연합(EU)을 통해 단일 경제권을 달성하였고, 또한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범위는 유럽 중심부에서 그 주변까지 확장되어 가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아메리카의 전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상황은 어떠한가? 오늘날 동아시아의 협력관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오히려 동아시아 각국은 군사비를 늘려가면서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인구 규모의 측면이나 경제력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동아시아는 이미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동아시아 각국이 각자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집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의 국수주의 역사관이 동아시아 협력관계의 낙후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중 양국은 상대편을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만주 땅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각지에 진출하여 공장을 짓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로 보더라도 만주 땅이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경제협력 추세로 본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국경이 어디인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이인철, 2004, 232-233).

중국의 역사 왜곡에 분개한 우리나라 학자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중국 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중심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최광식, 2004, 63). 이러한 입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국사 연구를 국책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가와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축적되기 어렵다. 중국측이 국가적인 지원으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듯이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국사과목은 중·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의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사 과목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사학자들은 “북한·중국·일본·미국·유럽 등의 학자들과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자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영어로 출판하는 국제적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및 발해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논지를 영어로 출판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한다(최광식, 2004, 67). 그러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이전에 우리의 국사학을 보편적인 인문사회과학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사학이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학문으

로 치우쳐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학을 보편적인 인문사회과학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文 獻

- 공석구, 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서경문화사, 서울.
- 공석구, 1996, 고구려의 변천: 영토확장,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 -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61-76.
- 국사편찬위원회, 2002, 고등학교 국사, 두산, 서울.
- 김구진, 2004, 고구려·발해사의 연구방법론,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237-278.
- 김기홍, 1998(10월), 새롭게 쓴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서울.
- 김용만, 1999, (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서울.
- 김정배 엮음, 1994,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재단법인)대륙연구소출판부, 서울.
-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노중국, 1990,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의 제문제에 관련하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한국고대사 연구회 편), 민음사(대우학술총서), 서울 20-28.
- 노대돈, 1990, 삼국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특강(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44-57.
- 노대돈, 2000(2월),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서울.
- 마대정, 2004,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관련된 문제들,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29-46.
- 민족문화사 편집부 편, 1995, 고구려 고고학, 민족문화사, 서울.
- 변태섭, 1998(4월 6월), 한국사통론, 삼영사, 서울.
- 서길수, 2003(5월),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홀본·국내성 편), 사계절, 서울.
- 서병국, 1997, 고구려제국사, (도서출판)혜안, 서울.
- 서병국, 2000, 고구려인의 삶과 정신, (도서출판)혜안, 서울.
- 서병국, 2004, 펼쳐라 고구려, 서해문집, 서울.
- 손영중, 1997, 고구려사 1, 백산자료원, 서울.
- 손영중, 1997, 고구려사 2, 백산자료원, 서울.
-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서울.
- 손진태, 1950, 국사강좌, 을류문화사, 서울.
- 손진태, 1954, 한국민족사개론, 을류문화사, 서울.
- 신형식, 2003, 고구려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서울.
- 신형식 편지, 2004,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 백산자료원, 서울.
- 신형식, 2004,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상과 그 허구성,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171-192.
- 양보용, 2004, 고구려와 고려의 관련문제,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137-156.
- 양춘길·경철화, 2004, 고구려는 중국 동북역사상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157-164.
- 여호규, 1996,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 -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12-42.
- 윤호우, 2004, 동북공정과 간도,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323-338.
- 유석재, 2004, 언론인의 입장에서 본 동북공정의 문제점,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279-302.
- 유자민, 2004, 중화천하질서하의 고구려,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47-62.
- 유정창, 2004, 로마인보다 위대했던 고구려인, 백산자료원, 서울.
- 윤명철, 2004, 역사전쟁, (주)안그라픽스, 서울.
- 이대룡, 2004, 고구려와 당 왕조 친속관계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지), 백산자료원, 서울.

- 을, 25-28.
- 이도학, 2002(3쇄), 한국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김영사, 서울.
- 이문기, 1990, 신라 상고사의 통치조직과 국가형성 문제,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한국고대사 연구회 편), 민음사(대우학술총서), 서울, 247-254.
- 이옥·주용립·지병목, 2000(재판), 고구려연구, 도서출판 주류성, 서울.
- 이인철, 2004, 고구려사를 빼앗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저), 백산자료원, 서울, 193-236.
- 이전, 1999,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가, 한울, 서울.
- 이전, 2003, 고구려가 한민족사로 인식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5(3), 87-100.
- 이전, 2004, 우리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재고찰, 문화역사지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6(1), 197-214.
- 이전, 2005, 고조선과 고구려, 경상대학교 출판부, 진주.
- 이정신, 2004,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서울.
- 이종욱, 2006, 민족인가, 국가인가? 소나무, 서울.
- 이치정, 2004, 수·당의 고구려 정벌,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저), 백산자료원, 서울, 97-136.
- 이형규외 3인, 고구려의 고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 정익교, 1998, (단숨에 읽는) 고구려사, 경학사, 서울.
- 채희국, 1982, 고구려 역사 연구: 평양 천도와 고구려의 강성, 백산자료원, 서울.
- 최광식,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주)살림출판사, 서울.
- 최규성, 2004,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사 내용을 편역하면서,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신형식 편저), 백산자료원, 서울, 25-28.
- 최몽룡, 1989, 마한·목지국 연구의 제문제, 한국상고사: 연구현황과 과제(한국고대사학회 편), 민음사, 서울, 131-132.
- 최무장, 1995, 고구려고고학 1,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86, 민음사, 서울.
- 최무장, 1995, 고구려고고학 2,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86, 민음사, 서울.
- 최종규, 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서울.
- 퀴스텔 드 쿨랑주(김응중 역), 2000, 고대도시, 아카넷, 서울.
-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97(초판2쇄), 삼한의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신서원, 서울.
- 한국상고사학회, 1991(2판), 한국상고사, 민음사(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서울.
- 한국역사연구회, 1990(재판3쇄),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서울.
- 한국역사연구회, 1997, 고구려왕조 700년사, (도서출판)오상, 서울.
-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1994, (문답으로 읽은) 한국고대사 산책, 역사비평사, 서울.
- 한상복·이문웅·김광익, 1994,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한영우, 1990, 근대 한국역사학의 발달, 한국사특강(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허성정, 2004, 대륙을 호령한 배달한민족사: 아! 고구려, 도서출판 유림, 서울.

(접수: 2007. 5. 7, 채택: 2007. 5. 29)